

야권, '윤·명 통화'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당 압박

“공천 개입 증거”...탄핵 여론전 이재명 “참으로 심각한 상황” 혁신당 “탄핵 사유 차고 넘쳐” 대통령실 “공천 지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31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파일 공개를 고리로 대어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

공천 개입 증거가 드러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탄핵 여론전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 파일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날 전인 5월 9일에 이뤄졌으며, 다음날 10일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줬다고 했다. 이후 이 녹취는 당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제3자와 통화한 녹취 파일도 함께 공개했다.

파일에는 명씨가 제3자에게 “(윤 대통령과) 통화를 끝자마자 (김 여사로부터)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은 거야”라고 언급한 내용 등이 담겼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신분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

기자회견 직후, 야당에선 ‘김건희 특검

법’ 처리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에 취해서 법도 과거도 잊은 것인지,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윤 대통령의 오만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검이 아니라 특검법”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야 나라가 산다”고 가세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2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동시에 윤·오 프라인서 ‘천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2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윤 대통령 탄핵 여론전을

편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아직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나”며 “검찰이나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도록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최근 설명을 첨부했다.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전략공천 지역 결정은 시간상의 문제로 불가피했고, 김영선 후보 공천은 공관위가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라며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 수도권·비수도권간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

청년 교육·주거환경도 지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는 31일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격차해소산업)’이 비수도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수도권·비수도권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발의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등 6대 격차 해소 분야를 제시했다.

특별법은 이 가운데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를 격차해소 산업으로 선정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비수도권에 격차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소어링(비용 절감이 목적으로 생산비와 해외의 낮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해당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부터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도걸, 국회 예결특위 소위 위원 선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이 3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정 의원과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에 더해,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진·장철민·정일영·윤준병·이용선·김태선·안도걸 의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위원 50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심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위원회 상정 △중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별 심사 △조정소위 심사 △토론·표결 △심사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 심사는 오는 7~8일에 중합정책질의, 11~14일 부별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18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위에서 합의되면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 일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역 예결위원은 주철현 의원(여수을)과 안도걸·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권항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등 4명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 5조9천억 편성”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격려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

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의 전기요금 이미 지원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원(총 25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000억 원 규모의 배대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을 찍었다”며 “내년도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야당 의원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

야당 의원들이 31일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연대’를 출범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가칭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연대 출범 준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

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문정복·한민수·김동아 민주당 의원이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헌법 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루는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진영 사회원로들로 구성된 ‘전국비상사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 제

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탄핵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여론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퇴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단축헌법개정은 지루한 법리논쟁이 필요하지 않고 110일 이내에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될 수 있는 등 신속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한 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진보당 광주시당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전개”

진보당 광주시당은 3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된 진보당은 국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내기 위한 실천에 돌입한다”

며 “중앙당은 윤석열 퇴진 대행진단을 결성해 전국을 순회하고, 전국 16개 시도당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당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중심사 투표소 설치를 시작으로 거리 투표소 설

치와 상가 방문을 통해 오는 12월 7일까지 투표 활동에 나선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김재연 상임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집중 활동을 한다.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대행진단을 결성해 전국을 순회하고 전남도당과 함께 온오프라인 국민투표를 한 뒤 야권 국회의원들과 향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